

# 전환시대의 사회혁명: 필리핀 혁명운동의 위기와 행방

박사명\*

##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혁명운동의 도전
II. 혁명의 원형	1. 혁명의 이념
III. 혁명의 객관적 조건	2. 혁명의 전략
1. 대외적 조건	3. 혁명의 정책
2. 대내적 조건	V. 혁명운동의 행방

## I. 문제의 제기

상호의존적 시장경제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역사적 전환시대에 맑스-레닌주의 및 모택동(毛澤東)사상에 입각하여 정치체제와 사회구조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사회혁명<sup>1)</sup>을 추구하여 온 필리핀의 혁명운동은 심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위기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권의 와해에 따른 세계체제의 급속한 재편과 대내적으로 라모스(Fidel Ramos)정권의 등장에 따른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대한 혁명운동의 주체적 대응의 실패에서 드러난다. 역동적인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라모스정권은 공산당(CPP: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신인민군(NPA: New People's Army)·민족민주전선(NDF: National Democratic Front)의 삼각체제가 주도하는 혁명운동에 대한 합법적 정치과정으로의 포섭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 이념 및 전략을 둘러싼 혁명운동 내부의 심각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혁명운동 지도부는 기존의 노선에 대한 교조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sup>2)</sup>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여기에서 '사회혁명'은 정치체제의 재편에 그치는 '정치혁명'에 비하여 사회구조의 전환까지 수반하는 더욱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혁명을 뜻한다.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3-5 참조.  
2) 혁명운동 내부에서의 최근의 논쟁은 Omar Tupaz, "Toward a Revolutionary Strategy of the 90s," *Kasarinlan*, vol. 7, no. 2-3 (4th Qtr 1991-1st Qtr 1992), pp. 58-89; Armando Liwanag, "Reaffirm Our Basic Principles and Rectify Errors" and Ka Barry, "Resist Authoritarian Tendencies within the Party! Let a Thousand Schools of Thought Contend!" *Kasarinlan*, vol. 8, no. 1 (3rd Qtr 1992), pp. 82-141. 갈등의 확산에 따른 혁명운동 내부의 혼란을

필리핀 혁명운동은 이미 1986년 이른바 '민중권력'(people power)을 통한 아끼노(Corazon Aquino)정권의 등장과정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당시보다는 훨씬 더 광범하고 심층적인 정치·경제적 변동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필리핀 혁명운동의 역사적 선택은 필리핀은 물론 제3세계 전체적으로도 중대한 이론적 및 실천적 함의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형식적' 탈식민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식민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른바 '신식민지적' 현실의 근본적 해방을 지향하는 제3세계의 혁명운동이 이제까지 가장 지구적이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이며, 따라서 필리핀 혁명운동은 제3세계에서의 '고전적' 사회혁명의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한 최후의 시험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필리핀혁명'의 객관적 상황과 혁명운동의 주체적 대응에 내재하는 이론적 및 실천적 위기와 관련하여 그 가장 핵심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해부함으로써 혁명운동의 행방을 전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필리핀혁명'의 원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중국혁명의 과거와 '필리핀혁명'의 현재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중국혁명의 주·객관적 조건은 과연 '필리핀혁명'의 주·객관적 조건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필리핀 혁명운동은 그 이념적 목적과 전략적 수단의 전면적 전환에 대한 요청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이 간과될 경우, 필리핀 혁명운동이 1960년대 후반 이후 구공산당(PKP: Partido Komunista ng Pilipinas)의 '군사적 모험주의'<sup>3)</sup>에 겨누었던 비판의 화살은 이제 다시 자신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 II. 혁명의 원형

필리핀의 혁명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필리핀혁명'의 이념적 및 전략적 원형은 중국혁명이 다. 1968년 말에 창당된 필리핀공산당(CPP)의 강령은 "모택동사상과 필리핀혁명의 구체적 실천의 통일"이 당의 지상과제이며, '맑스-레닌주의의 절정'이자 '보편적 이론' 또는 '보편적 잔리'인 모택동사상이 당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지도이념임을 선언한다.<sup>4)</sup> 이 새로운 혁명

통제하기 위하여 공산당(CPP) 중앙위원회는 당의 기본노선에 관한 일체의 공개적 논쟁을 금하고 있다. Frank Longid, "CPP Leaders Crack Whip," *Manila Chronicle*, January 6, 1993, p. 3; Jose Ma. Sison, "A Few Renegades Do Not Make a Split within the Movement," *Manila Chronicle*, January 9-15, 1993, p. 11 참조.

3) Alfredo B. Saulo, *Communism in the Philippines: An Introduction*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90), pp. 218-19; Jose Maria Sison with Rainer Werning, *The Philippine Revolution: The Leader's View* (New York: Crane Russak, 1989), p. 43.

4) Saulo, *op. cit.*, pp. 183-85, 209.

운동의 지도자 시손(Jose Maria Sison)에 의하면, 필리핀공산당(CPP)은 “반식민지(semicolonial)·반봉건적(semifeudal) 사회에서의 신민주주의혁명(특히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한 인민전쟁이론)과 그에 후속하는 사회주의혁명(특히 그 토대의 건설)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모택동에 의존하였는 바, 중국혁명이 ‘필리핀혁명’의 원형으로 수용된 결정적 단서는 바로 “과거 중국의 사회조건과 현재 필리핀의 사회조건 사이의 기본적 유사성”에 있었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신인민군(NPA)의 초기 사령관 부스카이노(Bernabe Buscayno)도 1968년 공산당(CPP)의 창당에 임하여 시손의 주장에 따라 ‘필리핀혁명’의 원형으로 채택되기에 이른 중국혁명에서의 공산당의 목표, 신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공산주의사회 등에 관한 시각은 양국의 역사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필리핀혁명’의 그것과 전적으로 일치되었으며, “차별성은 오직 전술적 차원뿐”이었음을 밝히고 있다.<sup>6)</sup> 요컨대, 필리핀의 새로운 혁명운동의 관점에 있어서 ‘필리핀혁명’과 중국혁명의 관계는 이념적 및 전략적 차원에서의 기본적 유사성과 전술적 차원에서의 부차적 차별성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 중국혁명 그 자체는 제3세계 전체에 일반화될 수 있는 보편성의 체현이 아니라, 모택동이 강조한 바와 같이 맑스주의의 보편성과 중국실정의 특수성이 일정하게 결합된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공산주의자는 맑스주의의 중국적 응용에 있어서 맑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완벽하게 통일해야 한다. 즉 맑스주의가 유용한 것일 수 있기 위해서는 민족적 특수성에 적합한 민족적 형식을 획득해야 하며, 주관적·도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sup>7)</sup> 더욱이 맑스주의의 보편성과 중국적 특수성의 결합이라는 일견 매우 구체적인 듯한 개념조차도 역사적으로는 문화혁명 또는 ‘계속혁명’으로 전형화된 모택동의 급진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초급단계’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정형화된 등소평(鄧小平)의 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혁명운동이 ‘필리핀혁명’의 원형으로 추대하기에 이른 중국혁명

5) Sison, *op. cit.*, pp. 50, 179.

6) “투쟁과정에서 배운 교훈들--민중에 의거하여 전진한다.” 공제욱 외, 『필리핀 2월혁명: 마르크스 독재정권의 붕괴와 민족민주운동』 (민중사, 1987), pp. 225-26. 신인민군(NPA) 창설과정에서의 Sison과 Buscayno의 관계에 대해서는 Sison, *Ibid.*, pp. 57-60 참조.

7)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編, 『毛澤東集』 (東京: 蒼蒼社, 1983), 7卷, p. 198.

8) 1992년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맑스주의와 중국실정을 결합시킨 최선의 성과이며 모택동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이 시대 중국의 맑스주의”로 규정되고 있다. 『人民日報』, 1992. 10. 19 사설 (『동아일보』, 1992. 10. 26에 전재) 참조.

은 실제로는 문화혁명적 시각을 통하여 굴절된 중국혁명의 한 특수한 국면일 뿐이다. 1960년대의 베트남 민족해방전선(NLF)과 인도네시아 공산당(PKI)의 투쟁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의 다양한 혁명운동 가운데 필리핀 혁명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된 것은 중국 문화혁명의 이론과 실천인 것이다. 예컨대 필리핀공산당(CPP)은 그 창당에 즈음하여 “문화대혁명의 전면적 승리, 반혁명적·수정주의적 배반자이자 반역자인 유소기(劉少奇) 일당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중심적 보루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강화를 예찬”하고 있었던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은 모택동의 소련에 대한 문화혁명적 시각이 필리핀 혁명운동의 소련에 대한 시각에 기계적으로 투사된 결과, 1980년대 전반까지도 소련은 필리핀 혁명운동에 의하여 ‘현대수정주의(modern revisionism)·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사회제국주의(social imperialism)’로 전락함으로써 사회주의 대열에서 이미 이탈해버린 국가로 규정되고 있었다.<sup>10)</sup> 소련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바, “양자는 인민, 혁명, 중국 등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동맹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련은 마르코스(Ferdinand Marcos)정권과도 그 관료자본주의(bureaucratic capitalism)적 성격에 있어서 동일하다. “양자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가 독점적 관료자본주의인데 비하여 다른 하나는 종속적 관료자본주의라는 것뿐이다. 관료자본가들은 자기들에게 착취할 인민이 있는 한 언제든지 서로 제휴할 수 있다.”<sup>11)</sup>

중국과 소련이라는 혁명의 두 유형 가운데 이념적 및 전략적으로 중국형에 일방적으로 경사되었던 필리핀의 혁명운동에 대하여 그러한 중국지향적 시각의 수정을 강요한 것은 등소평정권의 강화와 고르바초프(Gorbachev)정권의 등장이 초래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전혀 새로운 객관적 상황이었으며, 이제 소련은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다시 사회주의국가로 복권되기에 이른다.

필리핀공산당(CPP)은 소련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있는 국가로 간주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사회제국주의로 지칭하는 것을 중지한 바 있다. 소련에서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인

9) Saulo, *op. cit.*, p. 184. 필리핀 혁명운동에 미친 중국 문화혁명의 구체적인 영향은 Gregg R. Jones, *Red Revolution: Inside the Philippine Guerrilla Mov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89), pp. 23-30 참조.

10) *Ibid.*, p. 185; Barry, *op. cit.*, p. 140; Amado Guerrero, *Philippine Society and Revolution* (Oakl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lipino Patriots, 1979): 아마도 구에레로 (정종길 역), 『필리핀 사회와 혁명』 (공동체, 1987), p.250. 이하에서 인용되는 부분들은 의미의 보다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이 역사의 표현을 필요에 따라 다소 수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11) *Ibid.*, pp. 164-65.

정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소련이 사회주의로 간주되는 것이다. ... 과거에 당의 문건은 (소련에서) 주요한 생산수단이 공유화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소비에트 관료집단--당시에는 관료독점자본가라 부름--이 거액의 보수와 특전, 그리고 기타의 탈법수단을 통하여 이윤을 사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소련을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였다. 그러한 문건은 소비에트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필리핀 혁명가와 사회연구자의 어떠한 직접조사 결과도 아니었으며, 우리가 연대하고 있었던 (중국의) 당으로부터 1963년 --거대한 (중·소) 이념논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때--이후에 나온 이차자료에 근거한 것이었다.<sup>12)</sup>(강조와 괄호는 인용자)

그러나 이와 같이 뒤늦은 시각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문화혁명적 관점의 핵심적 요소인 소련체제의 관료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새로운 해명도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진적 평등주의와 반관료주의적 대중노선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혁명에 대한 문화혁명적 시각까지 폐기된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약 소련혁명의 관료주의적 퇴행에 대한 문화혁명적 비판이 철회된 것이라면, 중국혁명에 대한 문화혁명적 시각도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sup>13)</sup>

여하튼 소련혁명에 대한 시각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소련체제의 와해에 따라 '필리핀혁명'의 원형으로서의 문화혁명적 중국형은 물론 비문화혁명적 소련형마저 실종됨으로써 필리핀 혁명운동의 이념적 기반은 전면적으로 함몰하게 된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 및 1986년 마르코스정권의 붕괴 이후 한때 혁명운동의 일각에서 '필리핀혁명'의 보다 적실한 전략적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던 니카라과(Nicaragua)혁명조차도 대중의 민주적 선택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반전되고 말았다.<sup>14)</sup> 따라서 이제 남아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등소평의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 뿐이다. 그리고 중국혁명의 그와 같은 귀결이야말로

12) Sison, *op. cit.*, p. 183.

13) 이 문제와 관련하여 Sison은 "문화대혁명은 주로 중국공산당(CPC)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것은 이미 사회주의로 이행한 사회에서의 반(反)수정주의적 혁명으로 설정된 것이었다. 그것이 필리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的问题是 신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이라는 필리핀공산당(CPP)의 일차적 관심사에 비하면 이차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는다"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Ibid.*, pp. 50-51.

14) 혁명운동의 일각에서는 농촌중심의 인민지구전전략에 집착하는 경직된 중국형보다는 다양한 비공산주의세력과의 반소모사(Somoza)연합전선을 통한 도시봉기전략에 성공한 니카라과형이 '필리핀혁명'에 더 적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공산당(CPP) 지도부의 노선전환을 유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Jones, *op. cit.*, pp. 159-61, 278-79; Sison, *op. cit.*, pp. 128-30; Gareth Porter, "Strategic Debates and Dilemmas in the Philippine Communist Movement," *Pilipinas*, no. 13 (Fall 1989), pp. 22-25 참조. 사회주의권이 해체된 이후 가열되고 있는 혁명운동 내부의 논쟁에서 다시 니카라과형 도시봉기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예는 Tupaz, *op. cit.*

‘필리핀혁명’의 원형으로 설정된 문화혁명적 중국혁명의 어떠한 일정에서도 예견된 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와해는 객관적 상황의 급전에 대응하는 필리핀 혁명운동의 새로운 이념적 및 전략적 모색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 문화혁명적 원형으로의 도피를 초래한다. 시슨에 따르면, 붕괴되어 간 것은 레닌과 스탈린이 구축한 바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1956년 이후 현대수정주의에 의하여 복원된 관료자본주의에 치장되었던 ‘사회주의의 가면’일 따름인 것이다.<sup>15)</sup> 고도로 유동적인 사태의 진전에 따라 이와 같이 극적인 반전을 거듭하는 필리핀 혁명운동의 사회주의에 대한 시각은 ‘필리핀혁명’의 원형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이념적 공황’이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바로 필리핀 혁명운동의 이론적 및 실천적 위기의 심연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sup>16)</sup>

모택동과 마찬가지로 시슨 또한 필리핀 혁명운동에서의 교조주의 및 경험주의를 포함한 ‘주관주의적’ 오류를 경고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필리핀혁명’의 중심적 동력은 필리핀의 구체적 현실에서 태동한 것이므로 그 어떤 외국혁명도 ‘무비판적 복사나 모방을 위한 모형’일 수 없다는 시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sup>18)</sup> ‘필리핀혁명’의 이념적 및 전략적 지형에서 중국혁명은 여전히 그 교조적 원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혁명의 파탄과 사회주의권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중국혁명에 부여되고 있는 그러한 교조적 위상은 바로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의 기본적 유사성’이라는 입증이 필요한 가설이 혁명운동 2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극히 당연한 전제로 치환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sup>19)</sup> 그렇다면, 과연 ‘필리핀혁명’의 객관적 조건에 대한 혁명운동의 이론적 관점과 그에 입각한 실천적 도전의 핵심적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혁명운동의 그와 같은 이론과 실천은 어떠한 가능성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15) Sison, *op. cit.*, p. 11; Liwanag, *op. cit.*, p. 93도 참조.

16)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혁명운동 내부의 위기의식은 Walden Bello, "The Crisis of the Philippine Progressive Movemen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Kasarinan*, vol. 8, no. 1 (3rd Qtr 1992), pp. 143-53 참조. 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에 관한 혁명운동 내부논쟁에서의 지도부의 시각에 대한 비판은 Barry, *op. cit.*, p. 140 참조. 그는 Sison 자신이 1980년대 후반에 소련 및 동구제국을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한 바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의 해악, 자본주의의 복원, 현대수정주의 등이 붕괴의 요인이라는 지도부의 시각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주의권이 채택한 잘못된 사회주의 모형 즉 스탈린주의모형 자체가 그 원인이라는 관점이 혁명운동 내부에 상당히 강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구에레로, *op. cit.*, p. 213.

18) Sison, *op. cit.*, p. 181.

19) Liwanag, *op. cit.*, p. 89 참조. Armando Liwanag은 Sison의 또 다른 가명이다.

### III. 혁명의 객관적 조건

#### 1. 대외적 조건

중국혁명의 주체적 특수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모택동도 중국혁명에서의 대외적 조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다. 그에 의하면, 소련혁명조차도 일정한 대외적 조건에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국제적 원조가 없어도 승리는 가능하다’--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여하한 국가의 진정한 인민혁명도 각종의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적 혁명역량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리의 쟁취가 불가능하며, 승리하는 경우에도 그 승리를 공고하게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찍이 스탈린이 우리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위대한 10월혁명의 승리와 강화도 그와 같이 이루어졌었던 것이다.<sup>20)</sup>

사실 레닌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을 가능하게 하였던 ‘1917년의 특수하고도 역사적으로 매우 독특한 상황,’ 즉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제국주의세력의 분열과 러시아사회의 황폐화를 강조한 바 있다.<sup>21)</sup> 이와 관련하여 스탈린 또한 제국주의 양대 분파간의 전쟁, 제국주의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인민의 평화에 대한 갈망, 유럽에서의 강력한 노동계급의 부상, 전쟁으로 인한 혁명적 위기의 상승 등 ‘특수한 국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22)</sup>

필리핀의 혁명운동은 ‘필리핀혁명’의 국제환경에 대한 대단히 낙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견지하여 왔는 바, 그러한 낙관은 세계체제의 역동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보다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및 파국적 붕괴에 대한 주관적 확신에 입각한 것이었다. 공산당(CPP)은 그 창당선언에서 당시의 대외정세를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제국주의가 전면적 붕괴를 향하여 치닫고 사회주의가 전세계적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대”로 규정한 바 있다.<sup>23)</sup> 늦어도 1970년대 전반까지는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패전에 고무된 필리핀 혁명운동이 “미국은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쇠퇴하고 있고, 세계혁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전례없는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전진”하고 있으며, “이 국제적 요인이 필리핀에서의 인민민주혁명의 진전과 그에 뒤이은 사회주의의 도래를 재촉한다”고 선언할 수 있었을 지도

20) 毛澤東, “論人民民主專政”, 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op. cit.*, 10卷, p. 298.

21) J. V. 스탈린 (서중건 역), 『스탈린 선집 1: 1905-1931』 (전진, 1988), p. 159.

22) *Ibid.*, pp. 157-59.

23) Saulo, *op. cit.*, p. 183.

모른다.<sup>24)</sup>

그러나 세계체제의 지각변동이 예비되던 1980년대 후반에도 그러한 '희망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면,<sup>25)</sup> 필리핀 혁명운동의 이론적 동맥경화는 이미 치명적인 수준이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시손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파국적 위기와 사회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강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례없는 증권시장의 파탄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도래하였다. ...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개별 자본주의국가들은 악화일로의 위기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본주의국가의 노동자계급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반격을 개시하게 될 것이다. ... 민족해방의 외침과 혁명의 물결은 제3세계에서 더욱 격화될 것이다. ... 독립과 혁명을 지향하는 제3세계의 대세가 필리핀의 혁명투쟁을 더욱 유리하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이나 그 집권당들의 필리핀 혁명운동에 대한 지원역량은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sup>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현실에 잉태되고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아닌 바로 사회주의의 만성적 위기와 임박한 파국이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의 전면적 파국에 대한 시손의 사후적 합리화는 해체된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가면'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는 일정한 시기에 필연적으로 반제국주의적 사회주의운동의 재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른바 역사적 합법칙성에 대한 상투적 현사를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필리핀혁명'의 승리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제환경은 이제 완전히 소멸해 버린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sup>28)</sup> 따라서 필리핀의 현재와 중국의 과거 사이에는 혁명의 대외적 조건에 관한 여하한 '기본적 유사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2. 대내적 조건

대외적 조건이 혁명의 가능성과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혁명의 당위

24) 구에레로, *op. cit.*, pp. 209, 214.

25) 혁명전쟁에서 객관적 현실을 외면하고 단순한 열정에만 의존하는 공상적 계획을 자초하게 되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위험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바로 모택동이었다. Mao Tse-Tung, "Problems of Strategy in China's Revolutionary War," *Selected Military Writings of Mao Tse-Tung*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p. 86.

26) Sison, *op. cit.*, p. 175.

27) Liwanag, *op. cit.*, pp. 94-95.

28) 그러한 국제환경의 급변이 필리핀 혁명운동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략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Ciria-Cruz, *op. cit.*, pp. 58-59 참조.



성은 기본적으로 대내적 조건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필리핀 혁명운동은 공산당(CPP)의 창당에 즈음하여 '필리핀혁명'의 당위성을 중국혁명을 배태하였던 과거 중국사회의 성격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규정되는 필리핀사회의 성격에서 구하고 있었다. "오늘날 필리핀사회의 기본조건은 미제국주의·매판자본가·지주·관료자본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반식민지·반봉건적 국가라는 것이다."<sup>29)</sup> 그리고 그러한 필리핀사회의 성격은 혁명운동의 등장 이후 '마르코스 파시스트 괴뢰독재'를 거치며 20여년이 경과한 뒤의 '미국-아끼노(U.S.-Aquino)정권'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이 급격히 붕괴된 뒤 현재의 '미국-라모스(U.S.-Ramos)정권'에 이르러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0)</sup>

### 1) 반(半)식민지

필리핀 혁명운동이 필리핀사회 기본성격의 주요한 일면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식민지(semi-colony)라는 개념의 내포와 외연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혁명운동의 일상적 용법에 의하면, 식민주의는 세금징수 또는 무역독점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통한 수탈과 다양한 경제적 강제를 통한 약탈이 수반되는, 공식적 식민지에 대한 외세의 직접적 지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신식민주의는 불평등조약 등 다양한 종속기제를 통한 수탈이 수반되는, 형식적 독립국에 대한 외세의 간접적 지배를 의미한다.<sup>31)</sup> 그러나 필리핀 혁명운동에 있어서 반식민지와 신식민지는 그 개념적 차별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상호대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2)</sup>

필리핀 혁명운동의 관점에 의하면, 반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로서의 필리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경제·정치·문화·군사·외교 등이 여전히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미국의 그와 같은 반식민지적 지배장치는 라우렐-랭글리(Raurel-Langley)협정(1954년), 군사기지조약(1947년), 군사원조협정(1947년), 경제기술협력협정, 상호방위조약(1951년), 마닐라협정(1954년), 농산물협정, 문화교육협정 등 각종의 '불평등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33)</sup>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반식민지적 위상으로 인하여 1960년대 말 현재 필리핀 총기업자산의 최소한 50%와 외국인간자본 총투자의 80%를 미국자본이 지배하였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미국 민간자본 총투자의 최소한 60%가 필리핀에 집중되어 있었

29) Saulo, *op. cit.*, p. 196; 구에레로, *op. cit.*, pp. 97-100.

30) *Ang Bayan*, March 29, 1987, p. 2; Liwanag, *op. cit.*, p. 89 참조.

31) Sison, *op. cit.*, pp. 229-30, 233.

32) *Ibid.*, p. 21.

33) 구에레로, *op. cit.*, pp. 103-109.

다. 1968년 현재 공업제품은 필리핀 총수출의 8.3%에 지나지 않았고, 1972년 현재 필리핀의 총외채 가운데 미국이 45%,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금융기관이 12.5%를 점유하였으며,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표방한 투자촉진법과 수출촉진법은 “국내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소유와 지배를 영구화”하려는 술책에 불과하였다.<sup>34)</sup>

필리핀 혁명운동의 이와 같은 반식민지론은 반식민지와 신식민지라는 개념의 상호대체 가능성 자체가 입증하는 것처럼 과학적 검증을 거부하는 다분히 은유적인 정치적 수사(修辭)의 혐의가 농후하다. 무엇보다도 주권과 영토가 외세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유린·분점되고, 중앙국가기구의 유효성 자체가 의문스러울 만큼 공식적 식민지로서의 성격이 깊이 투영되어 있었던 식민지 및 반식민지로서의 중국의 과거가 필리핀의 현재와 등치될 수는 없다. 모택동은 중국사회의 성격을 아편전쟁(1940) 이후의 반식민지성에 만주사변(1931) 이후 일본점령지역의 식민지성이 중첩된 이중성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5)</sup> 이 점에 있어 필리핀 혁명운동의 반식민지론은 중국혁명의 이론적 도식에 필리핀의 현실을 기계적으로 대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식민지, 반식민지, 신식민지를 동일화하고,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의 차별성을 은폐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리핀 혁명운동은 필리핀사회의 기본성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 현상과 본질의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간과함으로써 형식과 현상의 중요성을 기각하는 신식민지론 일반의 비변증법적 본질주의를 답습하고 있다. 공식적 독립이라는 정치적 ‘형식’에 있어서의 ‘현상적’ 변화가 실질적 독립이라는 사회경제적 ‘내용’에 있어서의 ‘본질적’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식민지론 또는 신식민지론은 정태적 계속성만 일면적으로 부각하고 일체의 동태적 가변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결국 ‘반(半)’ 또는 ‘신(新)’이라는 역사적 조건의 내포가 사상되어 철저하게 탈역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주의적 관점으로 인하여 필리핀 혁명운동은 실제로 미군기지의 전면적 철수로 절정에 이르는 각종 ‘불평등조약’의 장기적 약화과정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공격의 주요한 가시적 표적들이 대부분 사라져 가는 현실에 대한 온당한 평가에 실패하고 있다.<sup>36)</sup> 식민지적 지배구조에 대한 본질주의적 교조주의가 ‘형식적’ 탈식민화 이후 필리핀국가

34) *Ibid.*, pp. 109-10, 113-14, 120.

35) 毛澤東, “中國革命與中國共產黨”, 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op. cit.*, 7卷, pp. 99-106 참조.

36) 필리핀 민족주의의 가장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표적이었던 미군기지의 철수과정에 대한 분석과 그것이 민족주의운동에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해서는 Miriam C. Ferrer, “The Dynamics of the Opposition to the US Bases in the Philippines” and P. N. Abinales, “Searching for the Philippine Eden in the Post-Bases Era,” *Kasarinlan*, vol. 7, no. 4 (2nd Qtr 1992), pp. 8-12, 62-87 참조.

의 대외적 자율성의 확대 가능성을 선형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역동적 정치과정에 대한 혁명운동의 주체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6년의 선거참여 거부결정에 대한 필리핀공산당(CPP)의 '자기비판'은 그 상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마르코스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갖는 성격과 그 행동방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이 주관적 의지로 필리핀 정치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미국이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호모순적 요구들에 관한) 미국의 딜레마를 간과하지 못했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지배하에 들 수 없는 필리핀 국내사태의 추이가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sup>37)</sup>(괄호는 인용자)

필리핀은 본질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지속적 지배에 예속되어 있다는 정태적 반식민지론이 고수되는 한, 필리핀 혁명운동이 동태적인 대내적 정치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장투쟁뿐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비판'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교조주의적 오류는 최근의 선거과정에서도 되풀이되었을 뿐만 아니라,<sup>38)</sup> '미국-아끼노정권' 및 '미국-라모스정권'이라는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에 대한 일관된 성격규정이 입증하는 바와 같이 정치구조와 정치환경의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전면적으로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필리핀사회의 반식민지·반봉건적 성격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sup>39)</sup>

그러나 역동적 현실은 군사기지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지배기제뿐만 아니라 라우렐-랭글리협정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수탈기제에 있어서도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변화의 진전을 과시한다.<sup>40)</sup> 예컨대, 미국에 대한 수출은 총수출의 53.5%(1957-60년)에서 29.6%(1978-80년)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총수입의 48.4%(1957-60년)에서 22.5%(1978-80년)로 이미 감소되고 있었다. 1990년 현재 필리핀의 총무역에서 미국시장이 점유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전통적인 일차산품의 수출도 총수출의 96%(1960년)에서

37) 필리핀공산당(CPP), "보이코트전술에 대한 필리핀공산당의 자기비판", 박은홍 편, 『제3세계 민주변혁과 선거의 정치경제학』 (백의, 1992), p. 221.

38) Rodney Tasker, "Grassroot Suppor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2, 1992, pp. 18-20 참조. 1922년 5월총선에서의 좌파의 정치적 실패에 대한 논의는 Josef L. Garcia, "No Left Turn" and Alexander R. Magno, "Defining the May 11 Mandate," *Kasarinlan*, vol. 7, no. 4 (2nd Qtr. 1992), pp. 5-7, 13-15 참조.

39) Liwanag, *op. cit.*, pp. 96-97.

40) 필리핀의 대미종속을 상징하였던 이른바 '자유무역'은 1974년 라우렐-랭글리협정의 종료와 더불어 폐지되었다. 필리핀의 미국에 대한 '특수관계'가 보다 주체적인 관계로 변화되는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은 Alejandro M. Fernandez,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The Forging of New Relations* (Quezon NSDB-UP Integrated Research Program, 1977) 참조.

63%(1980년) 및 25%(1990년)로 감소하였다. 1960년대까지도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미국의 비중은 총투자의 48%(1970-82년)와 총원조의 17.9%(1978-81년)--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은 32.8%--로 감소하였다.<sup>41)</sup>

'형식적' 탈식민화 이후의 이와 같은 '실질적' 변화를 교조주의적 반식민지론을 통하여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으로 기각하고 있는 한, 필리핀 혁명운동은 역동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의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추상적 반식민지론은 '필리핀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대한 혁명운동의 구체적 분석을 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 2) 반(半)봉건사회

필리핀 혁명운동은 필리핀을 반봉건사회로 규정한다.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봉건제는 토지 소유, 지대 또는 공납, 고리대금 등을 토대로 하는 재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반봉건제는 내부적 생산력이 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농업적이고 전(前)공업적이며, 그 생산관계가 도시의 매판적 대자본가계급과 농촌의 지주계급에 의하여 지배되는 경제"를 의미한다.<sup>42)</sup>

토지개혁과 공업화가 아니면 극복될 수 없는 필리핀사회의 그러한 반봉건적 성격은 미국 독점자본의 수탈을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손에 의하면, 미국독점자본의 필리핀에 대한 제국주의적 수탈을 위해서는 필리핀사회의 반봉건적 후진성의 조성과 온존이 오히려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필리핀사회의 이러한 반봉건적 성격은 일차적으로 미국독점자본의 낡은 봉건적 생산양식에의 침투 및 후자의 전자에 대한 종속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 낡은 봉건적 생산양식은 아직도 자본주의적 농장보다 더 광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봉건제는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강화·유지되어 오는 바, 그것은 대다수 대중의 빈곤을 영속화함으로써 인구의 최다수 부문인 농민계급을 연속시키고 농민의 저렴한 노동력 및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후진성을 조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 미제국주의와 봉건제 사이의 상보적·공생적 관계가 필리핀을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로 만든 것이다.<sup>43)</sup>

41) Hall Hill, "The Philippine Economy under Marcos: A Balance Sheet," *Australian Outlook*, vol. 36, no. 3 (December 1982), pp. 32-3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 1991 Yearbook*;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등 참조

42) Sison, *op. cit.*, pp. 22, 231, 234.

43) 구에레로, *op. cit.*, pp. 98-99.

제국주의와 봉건제의 그와 같은 종속관계에서의 전략적 매개고리는 여전히 상업자본적 성격이 지배적인 매관대자본가와 사적 축적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기구에 대한 접근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관료자본가이다. 요컨대, 필리핀사회의 반식민지성과 반봉건성의 관계는 제국주의에 의하여 형성되고 보호되는 반봉건제가 다시 제국주의적 지배구조를 떠받치는 토대로서 기능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인 것이다.

시슨의 분석에 의하면, 극심한 토지집중과 광범한 소작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필리핀의 반봉건적 사회경제구조에서 1980년대 말 현재 농촌 지주계급과 도시 매관대자본가계급은 인구의 1% 미만, 중간자본가(민족자본가) 및 도시 소자본가 등 중간계층은 각각 1% 및 8%, 기본 피착취대중인 노동자와 농민은 각각 15% 및 75%를 구성하고 있다.<sup>44)</sup> 이러한 분포는 기본적으로 20여년 전의 그의 분석과 동일하다. 심지어 1974년에는 전체인구의 85%가 농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빈농 및 농장노동자는 75%, 중농은 15%, 부농은 5%, 지주는 1% 또는 2%에 이르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었다.<sup>45)</sup> 그리고 그와 같이 20여년에 걸쳐 거의 고정화된 추정 농촌이 반식민지·반봉건적 지배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이고, 농민이 혁명의 주요 역량이며, 토지문제가 혁명의 가장 결정적인 과제로 규정되는 근거로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혁명운동의 그러한 주장은 객관적 현실에서 너무 유리되어 있다는 점이 필리핀 혁명운동의 반봉건사회론에 내재된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대외적으로, 필리핀사회의 반봉건적 구조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필리핀의 공업화를 저지하고 필리핀을 저렴한 일차산품 및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은 신국제분업(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의 전개에 따른 제3세계 공업화의 진전은 물론, 필리핀의 대외무역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미국에 대한 의존도 및 일차산품의 기여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설득력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공업화에 대한 제국주의의 부정적 역할에 관한 한,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의 '기본적 유사성'이란 객관적 현실과 무관한 주관적 신념일 뿐이다.

대내적으로도 필리핀의 현재는 중국의 과거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필리핀 농촌의 토지문제에 내재하는 중국의 과거와의 일정한 구조적 유사성은 나름대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공업생산이 10%에도 미달하고 농민이 인구의 80%를 상회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혁명은 실질상 농민혁명"<sup>46)</sup>일 수밖에 없었던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44) Sison, *op. cit.*, p. 22.

45) 구에레로, *op. cit.*, pp. 181-86, 217.

46)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op. cit.*, 7卷, p. 180.

다.<sup>47)</sup> 1990년에 이르러서도 농업에 고용된 노동력의 비율은 중국의 60%에 비하여 필리핀은 45%, 국민총생산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중국의 33%에 비하여 필리핀은 27%, 도시인구의 비율은 중국의 21%에 비하여 필리핀은 42%, 총수출에서의 일차산품의 비중은 중국의 29%에 비하여 필리핀은 25%에 불과하다.<sup>48)</sup> 필리핀의 현재는 농민혁명을 배태했었던 중국의 과거는 물론, 혁명 이후 40여년이 경과한 중국의 현재보다 훨씬 더 농민문제의 중심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다.

필리핀사회의 이와 같은 객관적 현실이 적어도 양적 차원에서는 혁명운동의 주관적 인식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양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혁명운동이 필리핀사회를 질적 차원에서 여전히 반봉건사회로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토지문제를 '필리핀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하는 관점을 고수하는 경우, 필리핀사회의 기본성격에 관한 추상적 논쟁의 귀추와는 무관하게 최소한 그러한 역동적 변화가 초래한 객관적 현실에 타당한 구체적 대안의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할 것이다.

## IV. 혁명운동의 도전

### 1. 혁명의 이념

객관적 조건이 중국의 과거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반식민지·반봉건적 사회로 규정된 필리핀의 현재에 적실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필리핀혁명'의 이념은 중국혁명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토목동은 그의 "신민주주의론"(1940)을 통하여 중국사회의 식민지·반식민지·반봉건적 성격은 신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두 단계를 요구한다는 중국적 혁명이론을 정립한 바 있다. 필리핀 혁명운동 또한 '필리핀혁명'의 과정을 인민민주주의혁명 및 사회주의혁명으로 설정하고,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를 신민주주의(new democracy), 민족민주주의(national democracy) 또는 인민민주독재(people's democratic dictatorship) 등과 상호대체가 가

47) 이와 관련된 혁명운동 내부의 논쟁은 Julieta de Lima-Sison, "Jose Maria Sison on the Mode of Production," *The New Philippine Review*, vol. 1, no. 1 (May-July 1984), pp. 28-36; Gareth Porter, "Strategic Debates and Dilemmas in the Philippine Communist Movement," *Pilipinas*, no. 13 (Fall 1989), pp. 20-22 참조.

48) 앞의 주 30) 참조. 혁명운동의 지도부는 농민문제에 관한 이와 같은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반봉건사회론만을 교조적으로 강변할 뿐 유효한 반론의 제출에는 실패하고 있다. Liwanag, *op. cit.*, p. 96-97 참조. 이에 대한 혁명운동 내부에서의 문제제기는 Tupaz, *op. cit.*, p. 75 참조.

능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 1) 인민민주주의

모택동에 있어서 사회주의혁명의 고전적 두 단계--부르주아민주혁명 및 사회주의혁명--가운데 일차적 단계로서의 부르주아민주혁명은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혁명 이후의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중국혁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부로서의 '새롭고 특수한 중국적 형태'의 민주주의 혁명, 즉 노동자·농민·소자본가·민족자본가 등 모든 혁명적 계급--인민--의 연합독재인 신민주주의혁명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러한 신민주주의공화국은 한편으로는 '구민주주의'인 서구식 자본주의공화국의 부르주아독재와 다른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최신민주주의'인 소련식 사회주의공화국의 프롤레타리아독재와도 다른 것이다. 신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반식민지·반봉건사회를 우선 민족적으로 해방된 민주주의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민족민주혁명이며, 인민에 대한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와 반동세력에 대한 독재가 결합된 인민민주독재체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었다.<sup>49)</sup>

이와 같은 중국혁명의 이념은 필리핀 혁명운동에 도식적으로 수용된다. 필리핀사회의 반식민지·반봉건적 성격 때문에 '필리핀혁명'의 첫 단계는 제국주의적·봉건적 억압과 수탈로부터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민족민주혁명의 단계 즉 인민민주혁명의 단계'로 규정된다. "10월혁명과 제국주의전쟁의 폐허로부터 최초의 사회주의국가가 출현한 이후 식민지·반식민지에서의 제국주의·봉건제·관료자본주의에 대한 민족민주적 투쟁은 불가피하게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의 일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유형의 혁명'이다. 그러한 민족민주혁명 또는 인민민주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지도' 아래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등 모든 혁명적 계급 및 계층의 이해가 조화를 이루는 신민주주의혁명인 것이다.<sup>50)</sup>

그러나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화는 국가권력의 계급적 주체에 따른 분류인 레닌의 국가유형 또는 모택동의 국체(國體)에 상응하는 지극히 높은 추상화수준에서의 다분히 선형적인 선언에 불과하다.<sup>51)</sup> 따라서 그러한 국가권력의 구체적 조직형식과 행사방식의

49)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pp. 159, 217, 252.

50) 구에레로, *op. cit.*, pp. 169-70.

51) 레닌의 국가유형(type)과 통치형태(form)의 분류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허교진 역),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소나무, 1987), pp. 13-27; V. I. 레닌(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 (논장, 1988), pp. 26, 32, 50-51 참조. 모택동의 국체와 정체의 분류에 대해서는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pp. 160-62 참조.

차원, 즉 레닌의 통치형태 또는 모택동의 정체(政體)에 해당되는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인민민주주의의 경험적 내용은 여전히 모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택동은 신민주주의의 정체를 민주집중제로 규정한 바 있다.<sup>52)</sup> 그에 의하면, 신민주주의공화국의 경우 그 정체는 중앙 및 지방의 각급 인민대회와 거기에서 선출된 중앙 및 지방의 각급 정부로 구성되는 '진정한 민주제도'인 민주집중제는 "소수가 다수에, 하급조직이 상급조직에, 일부가 전체에, 전당원이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체제"로서 "공산당은 민주를 필요로 하면서도 집중을 훨씬 더 필요로 한다."<sup>53)</sup>

필리핀 혁명운동은 중국혁명의 모형에 따라 중앙에서 지방까지 각급 인민대회의 설치와 각급 인민대표의 선거를 약속하고,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집중과 집중적 지도하의 민주주의"인 민주집중제를 공산당(CPP) 및 '인민민주공화국'의 조직원칙으로 규정한다.<sup>54)</sup> 그리고 민주집중제에 대한 그와 같은 신념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필리핀혁명'의 이념과 전략을 둘러싼 혁명운동 내부의 논쟁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여전히 무비판적으로 고수되고 있다.

자유주의, 민중주의(populism),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기타의 뽀띠부르주아적 경향들이--심지어 제국주의 및 현대수정주의(특히 고르바초프식)의 선전까지--당내에 침투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 필리핀혁명의 사회주의적 관점, 민주집중제, 그리고 당의 여타 기본원칙들을 공격하는 초민주주의적(ultrademocratic)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sup>55)</sup>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위로부터의 집중지도를 결합한다는 민주집중이론의 실천적 비민주성은 사회주의권의 와해과정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집중제를 창시한 소련공산당 자신이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강령개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당의 민주화를 위하여 민주집중제원칙을 재고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당은 당내의 토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정한 민주화가 필요하다. 사교의 다원주의, 비판의 자유, 소수의견의 존중,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의 실시가 보장되어야 한다."<sup>56)</sup> 소련공산당이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최소화와 위로부터의 집중지도(독재)의 최대

52) 毛澤東, *Ibid.*

53) Stuart Schram, *The Thought of Mao Tse-Tu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 98에서 재인용.

54) Saulo, *op. cit.*, p. 189; 구에레로, *op. cit.*, p. 204.

55) Liwanag, *op. cit.*, p. 128. 이에 대하여 "당이 특정의 의견만을 인정하는 일인통치형 권위주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는 반론은 Barry, *op. cit.* 참조.

56)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소련공산당 새 강령 요지," 사상문예운동 편,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화를 초래하는 일당체제의 반민주적 역학을 차단하는 데 불가피한 것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선거제도, 다당제도, 권력분립 등 제도적 차원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필리핀 혁명운동이 표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미 파산이 선고된 낡은 교조에 불과하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내포가 가장 구체화된 문건이라 할 수 있는 민족민주전선(NDF)의 새로운 강령(1985)은 인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민주적 기본권은 인민민주공화국의 헌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57)</sup>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규정은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 실천이 보편적으로 입증하는 바와 같이 대중적 지지기반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술적 고려 이상의 의의를 획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여전히 특정의 궁극적 목적을 위한 일정한 단계적 수단으로서만 파악하는 도구주의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민족민주혁명을 위한 과도적 통일전선은 가장 혁명적인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가 ‘지도’하고, 또한 프롤레타리아는 그 가장 선진적 전위조직인 당이 ‘지도’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통일전선 외부의 반동 세력에 대한 ‘독재’와 통일전선 내부의 다양한 계급·계층에 대한 ‘지도’에는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의 편의적 허구화를 위한 뇌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민주전선(NDF)의 강령개정에 대한 혁명운동 지도부의 최근 비판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노동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에 이르는 과도기로서의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족민주주의의 반민주적 실체를 약역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족민주전선의 역사로부터 그 창설에서의 당의 역할 및 주도와 연합전선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삭제하는 자들이 있다. ... 사실, 민족민주전선의 강령은 (사회주의혁명이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건설이 아닌) “혼합경제”를 표방한 (이미 실패한) 산디니스타(Sandinista)의 강령과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에 대한 삭제를 핵심으로 하는 수정주의적 정권들의 정책에서 영향을 받아, 정치권력의 장악--신민주주의혁명의 기본적 완성--이후에도 사회주의사회가 아니라 “민족민주사회”의 건설이 목표라는 그릇된 관념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되고 회석되어 버린 것이다.<sup>58)</sup>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이 실패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체적 개념화와 제도화라는 실천적 과제가 유기되었기 때문이다. 모택동은 1940년 신민주주의를 정당

(풀빛, 1990), pp. 269-74.

57) 공제욱 외, *op. cit.*, pp. 348-49.

58) Liwanag, *op. cit.*, p. 112.

화합에 있어 모든 자본주의국가의 구민주주의--부르주아독재--는 '제2차 제국주의전쟁'의 개시 이후 '유혈과 부패로 물든 부르주아 군사독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59)</sup> 이는 파시즘과 반파시즘연합의 대결이라는 2차대전의 일면에 대한 의도적 왜곡일 뿐만 아니라, 2차대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권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속적 진전을 예견하지 못한 교조주의적 독단이다.<sup>60)</sup> 따라서 중국혁명의 신민주주의론에 입각한 필리핀 혁명운동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은 근본적으로 도착된 것일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의 궁극적 계급성을 기준으로 한 국체에 대한 선험적 정의를 떠나 국가권력의 구체적 조직형식 및 행사방식이라는 정체의 문제가 경험적으로 해명되지 않는 한, 필리핀 혁명운동이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미 퇴색한 이념적 환영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는 그 어떤 부르주아민주주의보다 백만배나 더 민주적"이라는 레닌의 선험적 명제가 경험적 현실에 남겨 놓은 레칙인 것이다.<sup>61)</sup>

## 2) 사회주의

'필리핀혁명'의 궁극적 이념인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제도적 설계는 객관적 역학관계에 대한 배려 때문에 혁명운동의 구체적 기획에는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소련체제에 대한 시각에서 드러난 것처럼 필리핀 혁명운동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핵심을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구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거기에 문화혁명적 관점을 통하여 여과된 중국혁명의 반관료주의적 대중노선과 급진적 평등주의가 깊숙히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 혁명운동은 중국혁명의 문화혁명적 특수성이 구현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의 인민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노동자·농민의 동맹에 기초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지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는 그 '가장 선진적 분견대인 필리핀공산당(CPP)'의 지도 아래 빈농·하층중농·농장노동자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존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경제적 토대는 이미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부터 예비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공업과 농업에서의 국영부문 및 협동부문이다. 민족자본과 부농경제 등 사영부문은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가 강화됨에 따라 프롤레타리아와 그 전위당은 노동자·농민·병사를 통하여 그러한 물질적 토대에 조응하

59) 毛澤東, "新民主主義論", p. 160.

60) Perry Anderson, *Considerations on Western Marxism* (London: New Left Books, 1976); 페리 앤더슨 (장준오 역), 『서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이론과 실천, 1987), pp. 74-76.

61) 레닌, 『프롤레타리아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p. 37.

는 상부구조의 '정치적 순수성'을 완성하기 위한 문화혁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sup>62)</sup>

그러나 필리핀 혁명운동이 그 혁명의 궁극적 이념으로서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역사적 보편성--소련에서의 생산수단의 공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과 일정한 특수성--중국 문화혁명에서의 급진적 평등주의와 반관료주의적 대중노선--은 모두 결정적 파탄을 경험한 바 있다. 필리핀 혁명운동이 사회주의의 그러한 경험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입각하여 '진정한 사회주의'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미 역사적 실험이 완료된 혁명의 원형에만 집착하는 한, '필리핀혁명'은 복고주의적 파탄의 전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 2. 혁명의 전략

'필리핀혁명'의 객관적 조건에 부응하는 일차적 혁명이념으로 설정된 민족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리핀 혁명운동이 제시하는 전략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민족민주 통일전선(national democratic united front)과 군사적 차원에서의 지구적 인민전쟁(protracted people's war)이다. 전자는 민족민주전선(NDF)을 통하여 시도되고 있고, 후자는 신인민군(NPA)을 통하여 추구되고 있다. '필리핀혁명'을 위한 이와 같은 전략은 '미제국주의, 매판대 자본가계급, 지주계급 등 착취계급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민족민주혁명 총노선에 따른 전략'으로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지도는 곧 공산당(CPP)의 지도를 의미한다.

### 1) 민족민주 통일전선

중국혁명에서의 성공적인 항일민족통일전선 경험에 따라 필리핀 혁명운동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의 '미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혁명과 봉건적 파시스트정권에 대한 민주혁명'<sup>63)</sup>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애국적 및 진보적 계급'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있다. 시몬에 따르면, "통일전선은 인민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의 계급동맹을 기초로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기타의 모든 애국계층을 포괄하고 있다. 국내의 대미동맹세력--대자본가, 지주, 관료자본가--은 급속히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sup>64)</sup>

62) 구에레로, *op. cit.*, p. 208.

63) *Ibid.*, p. 204.

64) *Ibid.*, p. 171.

필리핀 혁명운동은 농촌에서의 통일전선을 각별히 강조하는바, 그것은 전체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과 그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의 기반인 토지문제의 결정적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혁명의 통일전선전략에 비추어 볼 때, 필리핀 농촌에서의 반(反)봉건적 통일전선은 “빈농과 농장노동자에 주로 의존하고, 중농을 획득하고, 부농을 중립화하며, 계몽적 지주와 전체적 지주 사이의 모순을 이용하여 후자의 권력을 고립시켜 파괴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sup>65)</sup> 농촌으로부터 도시를 포위하기 위한 인민지구전에서 봉건적 지주제급에 대항하는 농촌의 통일전선은 농민과 노동자의 기본동맹을 바탕으로 외국 독점자본과 그 국내 동맹세력에 대항하는 도시의 진보적 소자본가(하층자본가) 및 민족자본가(중간자본가)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필리핀 혁명운동의 이러한 민족민주적 통일전선전략은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의 지배는 객관적 조건에 관한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의 현저한 차별성 때문에 의도하는 바 광범한 지지기반의 확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외적으로, 일본제국의 침략과 서구열강의 점탈로 인하여 민족주의적 공격의 표적이 대중의 일상적 체험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던 중국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와 수탈--비록 그러한 주장이 사실임을 가정하더라도--의 가시적 표적이 대중의 시야로부터 철저히 은폐되어 있는 것이 필리핀의 현실이다. 지난 1세기 동안 정치적으로 미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의 최대의 표적이었던 군사기치마저 사라졌다. 더욱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수탈 또한 ‘필리핀혁명’의 원형으로 기능하였던 중국 또는 베트남의 전면적 개혁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지속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현실 앞에서 그 대중적 호소력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대내적으로도, 과거 중국에서의 토지문제의 압도적 중요성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필리핀에서는 토지문제의 중심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 토지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50% 미만으로 감소될 만큼 사회변동이 진전된 필리핀의 현실에서 전국적 차원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위한 대중적 구심력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농민과 도시 노동자계급·중간계층·민족자본가의 통일전선 가능성을 최대화했던 마르코스 권위주의체제의 해체와 아끼노정권 및 라모스정권에서의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전국적 통일전선의 기반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대중의 정치적 정향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가는 것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sup>66)</sup>

65) Sison, *op. cit.*, pp. 52-53.

66) 대중적 지지의 ‘유례없는 상실’을 자인하는 혁명운동 지도부의 추정에 의하면, 농촌의 대중적 조직 기반이 1986년에서 1991년 사이에 40%나 감소하였다. Liwanag, *op. cit.*, pp. 85, 102 참조. 이와 관련된 전국적 여론조사의 결과는 Tony Guidote and Aida Lava, “Let’s give Peace a Chance?”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의 한계는 필리핀 혁명운동의 이념 및 전략에 내재하는 주체적 역량의 한계와 중첩되어 있다. 민족민주적 통일전선의 가능성이 절정에 이르렀었던 마르코스정권에서조차 필리핀 혁명운동은 중국혁명에서 차용한 이념과 전략에 대한 교조주의적 집착으로 인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따라서 혁명운동의 정치적 통일전선 조직인 민족민주전선(NDF)은 현재 기본적으로 공산당(CPP) 방계조직들의 집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통일전선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저해한 요인은 바로 통일전선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이 프롤레타리아의 '지도', 즉 공산당(CPP)의 이념적 및 전략적 기본노선을 수락해야 한다는 혁명운동측의 비타협적 조건이었다.<sup>67)</sup> 그러나 혁명운동의 시각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지도가 인민민주혁명의 단계와 사회주의혁명의 단계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sup>68)</sup>이기 때문에, 혁명의 이념과 전략의 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통일전선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요컨대,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혁명과 봉건주의에 대한 민주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중국혁명의 그것과 판이할 뿐만 아니라 민족민주적 통일전선을 위한 혁명운동의 주체적 역량 또한 그 이념적 및 전략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므로, 필리핀 혁명운동의 정치적 통일전선전략은 효과적인 혁명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혁명운동의 지도부도 민족민주전선(NDF)이 1973년 창설 당시 구상된 바 있는 '모든 애국적 및 진보적 계급 전체의 통일전선'을 위한 다각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본가 등 기본적 혁명세력'의 소규모 지하조직에 그치고 있음을 자인한다.<sup>69)</sup>

## 2) 지구적 인민전쟁

필리핀 혁명운동은 "정치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명제에 입각하여 권력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정치적 통일전선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 무장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노선을 고수한다. "무장투쟁은 혁명투쟁의 주요한 형태이다. 합법투쟁은 부차적이다. 선거투쟁은

*Social Weather Bulletin*, February 1990, p. 6; Dennis M. Arroyo, "The AFP vs. the NPA: The Issue of Mass Support," *Social Weather Bulletin*, September 1991, p. 3 참조. 1992년 5월총선의 결과는 David G. Timberman, "The Philippines at the Polls," *Journal of Democracy*, vol. 3, no. 4 (October 1992), pp. 110-24 참조.

67) Jones, *op. cit.*, pp. 145-53, 295-303; P. N. Abinales, "The Left and Other Forces: The Nature and Dynamics of Pre-1986 Coalition Politics," Third World Studies Center, ed., *Marxism in the Philippines* (Quez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88), pp. 26-49.

68) Saulo, *op. cit.*, p. 199.

69) Liwanag, *op. cit.*, p. 112.

합법투쟁의 가장 중요한 형태조차 아니다.”<sup>70)</sup> 그리고 그러한 무장투쟁은 반식민지·반봉건적 지배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농촌에서의 지구전을 통하여 충분한 역량을 비축하여 도시를 포위함으로써 적을 공략한다는 중국혁명에서의 지구적 인민전쟁전략을 통하여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인민지구전 전략의 채택이 곧 필리핀과 중국의 지리적 조건의 유사성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필리핀은 중국대륙과는 달리 소규모 산악형의 군도이다. 시슨에 의하면, “국토의 산악성이 우리의 전선을 축소하는 효과를 지닌다면, 국토의 군도성은 우리의 전선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sup>71)</sup> 따라서 필리핀 혁명운동은 군도성의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도의 집권화와 작전의 분권화’라는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적 대안이 혁명운동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한 성과는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시슨이 자부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전략은 “지구적 무장투쟁이 군도에서는 불가능하며, 혁명의 승리는 오직 또는 주로 지구적 합법투쟁과 수도권에서의 궁극적 무장봉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오랜 관점과의 결정적 결별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7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현실은 인민지구전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시슨은 필리핀 혁명운동이 1986년 이후 전략적 방어단계를 지나 전략적 대치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한 전략적 공격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sup>73)</sup> 그러나 현실적으로 혁명운동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붕괴, 미군기지의 철수, 민주화의 진전, 정부군의 효과적 작전 등이 그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74)</sup> 단순한 군사적 관점에서 필리핀의 지리적 군도성은 최선의 경우 유격전과 방어적 진지전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 방어단계와 전략적 대치단계는 허용할 수 있어도, 공격적 진지전과 정규적 운동전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 공격단계로의 전환까지는 허용하기 어렵다. 전략적 공격에 필수적인 병력집중과 병참지원은 지난한 과제이며, 혁명운동 스스로도 그러한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sup>75)</sup>

70) Sison, *op. cit.*, p. 139; 구에레로, *op. cit.*, p. 216.

71) 구에레로, *Ibid.*, p. 224.

72) Sison, *op. cit.*, p. 81. Sison의 전략적 공헌에 대한 평가는 Jones, *op. cit.*, pp. 95-97 참조.

73) 호세 마리아 시슨, “필리핀정세와 3단계변혁전략”, 『말』 (1989. 5), pp. 73-77.

74) 신인민군(NPA)의 병력은 24,000(1988년 중반)에서 19,000(1991년 말), 또는 25,800 (1988)에서 13,480(1992)으로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Asia 1991 Yearbook*, p. 200;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9, 1992, p. 12. 혁명운동측도 그 무장조직과 통제지역이 최근 수년간 40% 정도 약화되었음을 자인한다. Walden Bello, “The Crisis of the Philippine Progressive Movemen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Kasarinlan*, vol. 8, no. 1 (3rd Qtr 1992), p. 145 참조.

75) 전략적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병력집중의 중요성과 그 위험에 대해서는 Sison, *op. cit.*, pp. 43,

이와 같은 무장투쟁전략의 관점에서 선거투쟁은 단순한 전술적 고려의 대상에 지나지 않으며, 마르크스시대에 교조화된 그러한 전략은 아끼노시대에도 견지된다.<sup>76)</sup> 그러나 의회와 선거에 관한 한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에는 아무런 '기본적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경쟁적 선거제도의 경험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던 중국의 과거와는 대조적으로, 필리핀의 경우 선거제도의 모순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오랜 역사적 체험으로 인하여 그 제도화의 수준은 비교를 초월한다.<sup>77)</sup> 사회주의권의 와해가 반증하는 바와 같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치적 의사소통을 위한 시민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선거라는 민주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필리핀 혁명운동은 수단과 목적의 상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비합법적 무장투쟁과 합법적 선거투쟁에 대한 시각과 관련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던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의 기본적 차별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3. 혁명의 정책

필리핀 혁명운동은 반식민지·반봉건적 경제의 자립적 민족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서 '민족적 공업화'와 '진정한 토지개혁'을 제출하고 있다. '필리핀혁명'의 경제정책에서 '민족적 공업화'와 '진정한 토지개혁'은 밀접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그것은 '진정한 토지개혁'이 없이는 '민족적 공업화'를 위한 자원과 동력이 형성될 수 없고, '민족적 공업화'가 없이는 '진정한 토지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농업의 집단화 및 현대화가 불가능할 것

129-30; 병참지원의 중요성과 그 난관에 대해서는 Jones, *op. cit.*, pp. 242-44, 303-07; 인민지구전의 제3세계적 보편성론에 대한 비판과 그 전략적 3단계론에 대한 비판은 Tupaz, *op. cit.*, pp. 66-67, 78-79 참조. 혁명운동 내부에서도 이미 1990년 전략적 공격단계에 대한 전망을 포기한 바 있다. Bello, *op. cit.*, p. 146.

76) Porter, *op. cit.*, p. 20; Alexander R. Magno, "The Filipino Left at the Crossroads: Current Debates on Strategy and Revolution," Third World Studies Center, *op. cit.*, pp. 76-95; Olle Tornquist, "Democracy and the Philippine Left," *Kasarinlan*, vol. 6, no. 182 (1990), pp. 23-50 참조.

77) Porter, *op. cit.*, p. 21; Walden Bello, "The Crisis of the Philippine Progressive Movement," *Kasarinlan*, vol. 8, no. 1 (3rd Qtr 1992), p. 146. 물론 혁명운동 내부에는 비교적 방대한 중간계층, 장구한 민주적 전통, 서구적 정치문화와 정치체제의 깊은 영향 등 필리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련형 또는 중국형의 일당체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원적인 정치체제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Jones, *op. cit.*, pp. 277-83 참조. 마르크스정권 붕괴 이후에 복원된 정치체제와 정치과정의 민주적 정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좌파적 시각은 Ciria-Cruz, *op. cit.*, pp. 56-58 참조.

이기 때문이다.

### 1) 진정한 토지개혁

‘필리핀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봉건적 토지문제로 규정하며 반(反)봉건적 토지혁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명운동이 추구하는 ‘진정한 토지개혁’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사유제도에 입각한 토지의 균등한 무상분배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개혁정책은 어디까지나 민족민주혁명의 단계를 위한 최소강령일 뿐이며, 사회주의혁명의 단계를 위한 최고강령은 농업의 전면적 사회화이다.

토지는 토지 없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될 것이다. ... 이미 기계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플란테이션과 대농장은 국영농장으로 전환되어 농업 노동자가 프롤레타리아권력을 수립하고, 스스로 보다 양호한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모든 농촌지역에서 보다 높은 형태의 농업협동화를 위한 첫 단계로서 호조대(互助隊)와 노동의 상호교환제도가 창설될 것이다.<sup>78)</sup> (강조는 인용자)

다양한 형태의 협동화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를 향한 첫 단계’에 불과하며, ‘필리핀혁명’의 궁극적 목표는 여전히 농업의 전면적 사회화--집단화--에 있음이 자명하다.<sup>79)</sup> 그러나 혁명운동은 농업의 사회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표면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바, 그러한 침묵은 중국혁명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혁명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실증하는 바와 같이 농민의 토지소유에 대한 욕구를 고려함으로써 통일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sup>80)</sup>

필리핀 혁명운동은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서의 집단농장의 급속한 해체과정을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농업집단화의 교조주의적 신화에 매혹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에 있어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생산력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교조주의적 확신은 이미 명백한 주관주의적 환상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중국혁명의 신화적 과거에 압도되어 중국혁명의 모순적 현재를 직시하지 못할 경우, 필리핀 혁명운동의 교조주의적 농업정책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것은 농민과 농업의 전면적 파탄일 뿐이다.

78) Saulo, *op. cit.*, p. 202.

79) 구에레로, *op. cit.*, p. 205. 사실 필리핀공산당(CPP) 초기의 농업강령은 중국의 경험을 도식적으로 추종하여 농업의 전면적 집단화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Gregg, *op. cit.*, p. 277; James Putzel, *A Captive Land: The Politics of Agrarian Reform in the Philippines*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92), p. 9 참조.

80) Putzel, *op. cit.*, pp. 378-81; 공제욱 외, *op. cit.*, p. 350 참조.



그러나 한편 필리핀 혁명운동이 농업집단화의 신화로부터 깨어나는 경우, 토지혁명이 결정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 '필리핀혁명'의 이념적 목적과 전략적 수단은 근본적 재고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혁명이념과 농촌중심의 지구적 인민전쟁이라는 혁명전략의 핵심적 표적이 실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업의 사회화를 위한 토지혁명이 아니라 경자유전의 사유제도에 입각한 토지개혁이 궁극적 목표로 격상되는 경우, 사회주의이념과 무장투쟁전략은 그 역사적 필연성의 호소력이 소진되고 마는 것이다. 토지개혁은 그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형성에 따라서는 다양한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sup>81)</sup>

## 2) 민족적 공업화

필리핀 혁명운동은 근본적으로 '전(前)공업적'인 경제의 반식민지적 종속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자력생성의 원칙에 입각한 '민족적 공업화'를 추구하고 있다. '민족적 공업화'의 핵심적 전제는 "민족주의적 공업화의 명확한 계획에 입각하여 농업을 매판계급 및 지주계급의 이해가 아니라 인민 자신의 이해에 봉사하도록 재편하는 데 대중을 동원함으로써 우리는 외국원조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2)</sup> 민족민주전선(NDF)의 강령은 그와 같은 공업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공업화는) 경제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농업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의 발전에 따라 지금까지 기생적 지주계급이 착취하여 온 방대한 농업 잉여를 공업화의 추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농업의 성장은 농촌인구의 구매력을 증대할 것이고, 공산품의 국내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국가주도의 공업화는 주로 원료농산물과 광산물을 수출하고, 완제품과 자본을 수입하는 현재의 식민지적 무역구조를 타파할 것이다.<sup>83)</sup>(괄호는 인용자)

이와 같이 일차산품을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식민지적 종속경제를 민족적 자립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민족적 공업화'는 기본적으로 토지개혁에 의한 생산력의 해방을 통하여 농업잉여를 창출하여 생산적으로 투자하고, 농촌 구매력의 신장을 통하여 국내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1) 보다 현실적인 토지개혁 방안의 모색은 Putzel, *op. cit.*; Yujiro Hayami, Ma. Agnes R. Quisumbing, and Lourdes S. Adriano, *Toward an Alternative Land Reform Paradigm: A Philippine Perspective* (Mani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90) 참조.

82) Sison, *Struggle for National Democracy* (Quezon: Progressive Publications, 1967), p. 64.

83) 공제욱 외, *op. cit.*, pp. 352-55; Saulo, *op. cit.*, p. 202.

'민족적 공업화'에 소요되는 자본은 또한 외국자본과 내국자본에 대한 광범한 국유화를 통하여 국가의 세입을 증대하고 저축을 형성함으로써 보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84)</sup> 요컨대, '민족적 공업화'는 그 필요한 자본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농업에서의 토지개혁과 상공업에서의 국유화를 통하여 충분히 조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기술 또한 필리핀의 현실에 적합한 '자생적 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확보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주의권 및 제3세계로부터 기술, 자본 (부대조건 없는 장기저리의 원조) 및 판매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sup>85)</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필리핀 혁명운동은 1950-60년대의 수입대체공업화는 수입부품의 조립과 포장에 그치고, 1970-80년대의 수출지향공업화는 국내가공과 고용효과가 낮은 의류 및 전자 부문에 집중되어 외화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이른바 '신국제분업'이라는 것도 식민지경제를 신식민지경제로 재편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sup>86)</sup> 그와는 대조적으로 '민족적 공업화'는 중공업과 경공업, 공업과 농업, 중앙과 지방, 축적과 분배 사이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것은 국가계획의 주도적 역할과 시장기능의 보조적 역할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립적이고 균형적인 '민족적 공업화'는 기본적으로 자기완결적인 생산구조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sup>87)</sup>

'대약진운동'이라는 미증유의 파탄을 예고한 모택동의 "10대 관제론"을 방불하는 환상적 균형발전론과 종속이론에서 도출된 폐쇄적 자립경제론을 추종하고 있는 필리핀 혁명운동은,<sup>88)</sup> 한편으로는 중국혁명의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종속이론가--프랑크 (Andre G. Frank)--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논리와 싸워 이길 수 없으며, 세계경제와 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다. 세계에는 단 하나의 경제가 있으며,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이다. 따라서 당신들도 그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sup>89)</sup>

84) *Ibid.*

85) Renato Constantino, *The Nationalist Alternative* (Quezon: Foundation for Nationalist Studies, 1979), pp. 80-81 참조. Constantino 자신이 직접 혁명운동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급진적 민족주의는 초기 혁명운동의 이념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바 있다. '민족적 공업화'를 위한 자본 및 기술의 조달문제에 대한 이 정도의 구체적 언급마저도 혁명운동의 추상적 담론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의 이러한 입장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것임을 감안하면, 혁명운동의 정책적 급진성에 대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Constantino의 Sison에 대한 영향은 Sison, *The Philippine Revolution*, p. 19; Jones, *op. cit.*, pp. 43-44 참조.

86) Sison, *op. cit.*, pp. 152-54; Constantino, *op. cit.*, pp. 25, 87.

87) 공제욱 외, *op. cit.*, pp. 352-53.

88) Mao Tse-Tung, "On the Ten Great Relationships," Stuart Schram, ed.,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Talks and Letters, 1956-1971* (New York: Pantheon Books, 1974), pp. 61-83 참조.

89) 란돌프 데이비드, "개혁과 반동의 갈림길에 선 코리 아키노 정부", 공제욱 외, *op. cit.*, p. 308.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서의 집단농장의 전면적 해체는 농업집단화를 통한 농업잉여의 창출 가능성을 부정한다. 제3세계에서도 비교적 선진적인 신흥공업국의 경험은 '자생적 기술'의 개발이라는 이상과 현실의 심각한 격차를 입증한다.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에서의 시장 경제와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 전환은 내국자본과 외국자본의 국유화를 통한 자본축적의 가능성을 반증한다. 사회주의권의 전면적 와해로 인하여 사회주의권 및 제3세계 우방의 원조를 통한 자본·기술·시장의 보충에 대한 희망은 그 현실적 근거가 함몰되었다. 이제 '민족적 공업화'는 필리핀 혁명운동의 주관주의적 담론에서나 가능한 이미 형해화되어 버린 낡은 교조일 뿐이다.

## V. 혁명운동의 행방

필리핀 혁명운동은 그 혁명의 원형이 실종되고, 객관적 조건이 급변하고, 주체적 도전의 입지가 유실됨으로써 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필리핀 혁명운동은 이제 그 이념적 목표와 전략적 수단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필리핀사회의 미래에 대한 소명을 자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 혁명운동의 더욱 심각한 딜레마는 이제 어떠한 이념적 및 전략적 선택도 심각한 위험부담을 수반한다는 데 있다.<sup>90)</sup>

혁명운동의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손을 중심으로 한 혁명운동 지도부는 여전히 무장투쟁의 승리를 통한 합법화가 아닌 반식민지·반봉건적 국가권력에의 투항을 통한 합법화는 '혁명정당의 종말'을 의미할 뿐이라는 교조주의적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 의하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환상을 조작"하기 위하여 "반동세력이 연출"하는 연극에 불과하며, 최선의 경우에도 "선거투쟁은 합법적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합법적 투쟁형태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sup>91)</sup>

그러나 혁명운동의 이와 같이 '대안 없는 부정'은 역동적인 객관적 상황의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명운동의 주체적 역량을 철저하게 제약하고 있다. 예컨대 네멘소(Francisco Nemenzo)에 의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친위 교체설')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그것은 부르주아독재(파시즘)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중대한 차이를 모호하게 만든다. 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사회개혁주의로 전진할 수

90) Porter, *op. cit.*, pp. 32-34; Ciria-Cruz, *op. cit.*, p. 61.

91) Sison, *op. cit.*, pp. 138-39.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된다. 그것은 또 광대한 민주주의적 공간이 열려 있는 지금 시기에 비합법적 상황이나 적합할 정치적 사업 방식들에 우리를 묶어 두는 것이다.<sup>92)</sup>

필리핀 혁명운동은 마침내 혁명과 개혁의 선택을 요구하는 결정적 국면에 처하여 있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도 필리핀 혁명운동이 자주 암송하는 레닌의 이른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라는 명제에 투철하지 못할 경우 그 타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리핀 혁명운동은 1960년대에 태동한 이후 당초의 비판론을 뒤엎고 중국혁명의 경험을 필리핀사회의 특수한 조건에 창조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최소한 '전략적 방어'에는 일정하게 성공하였으나, '전략적 공격'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객관적 및 주체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 가능성이 사라지고 말았다. 시슨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신인민군의 무장부대들 자체는 일정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정치권력의 장악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적 지도와 (광범한) 대중적 지지가 없이는 그러한 무력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거나 역류하고 말 것이다."<sup>93)</sup>(괄호는 인용자)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 정치노선은 부상하지 않은 채, 여전히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를 동일화하는 맹목적 교조주의와 모든 주·객관적 조건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혁명적 낭만주의가 풍미하고 있다.

중국의 과거와 필리핀의 현재 사이에는 기본적 유사성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 차별성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중국혁명의 '보편성'과 '필리핀혁명'의 특수성이 창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객관적 및 주체적 조건에 비추어, '필리핀혁명'에 대한 세 가지의 거시적 전망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필리핀 혁명운동은 중국혁명의 문화혁명적 이념과 농촌을 중심으로 한 인민지구전적 전략을 포함한 기존의 교조주의적 노선을 고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의 제약과 주체적 역량의 한계 때문에 국가권력의 본격적 장악은 전혀 불가능하고, 최선의 경우 일부 지역에 할거하며 정치체제의 일각에 지속적 긴장을 투입하는 '유격주의(遊擊主義)'에 안주하거나, 최악의 경우 특정 지역에 출몰하며 간헐적 테러행위에 자족하는 '유구주의(流寇主義)'로 전략할 가능성이 크다.<sup>94)</sup> 그러한 비합법적 무장투쟁을 통하여 혁명운동은 소극적으로 필

92) 프란시스코 네멘소, "2월을 넘어서--현 정치정세와 필리핀 사회주의자의 임무", 공제욱 외, *op. cit.*, pp. 332-33.

93) Sison, *op. cit.*, p. 84.

94) '유격주의'는 毛澤東, "中國革命戰爭的戰略問題", 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op. cit.*, 5卷, p. 126 참조. '유격주의'는 1930년대 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모험주의적 이립삼(李立三)노선의 '정규원칙'에 입각하여 모택동의 지구전전략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였던 개념이다. '유구주의'는 毛澤東, "中國共產黨紅軍第四軍第九次代表大會決議案", *Ibid.*, 2卷, pp. 90-91. 필리핀 구공산당(PKP)의 무장

리핀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일정하게 부각할 수는 있겠지만,<sup>95)</sup> 적극적으로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확보할 수는 없다.

둘째, 필리핀 혁명운동은 이념적으로는 교조주의적 관점을 고수하는 반면, 전략적으로는 비합법적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선거투쟁을 비롯한 합법투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권정당으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 바, 그것은 혁명의 이념과 그 구체적 표현인 혁명의 정책이 효과적 대안으로서의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명운동은 체제외적 무장집단의 위상을 벗어나 프랑스공산당(PCF)과 유사한 체제내적 '항변정당(protest party)'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체제외적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천명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혁명의 일정을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9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운동은 소외된 계급·계층·집단의 사회적 불만에 대한 안전판으로서의 의도되지 않은 체제내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셋째, 필리핀 혁명운동은 전략적 차원에서의 선거투쟁을 비롯한 합법투쟁으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념적 차원에서도 교조적 맑스-레닌주의 및 모택동사상으로부터의 전면적 전환을 결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중도좌파정당으로서 이태리공산당(PCI)처럼 체제외적 혁명이 아닌 체제내적 개혁을 추구하는 합법적 개혁주의로 전향하게 될 것이며, 그 이념적 목적과 전략적 수단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적 스펙트럼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sup>97)</sup>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리핀의 경제적 후진성과 정치적 보수성 때문에 적어도 집권정당으로서의 중장기적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한 객관적 제약을 타개하기 위한 대중적 지지의 최대화 여부는 전적으로 기존의 다양한 개혁운동과의 광범한 정치적 연합 및 세계체제의 역동적 현실에 적합한 경제적 대안을 형성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무장투쟁이 아니라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중의 민주적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리핀 혁명운동이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최선의 길이다.<sup>98)</sup> 필리핀 혁명운동이 궁극적으로 선택하게 될 구체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막론하고 무장투쟁이나 선거투쟁은 모두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수반하게 될 것이며, 중

조직도 '후끄반란(Huk Rebellion)'이 진압된 1950년대 중반 이후 '유구주의'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었다.

95) 필리핀정부군의 대변인조차도 신인민군(NPA)이 근본적 개혁을 위한 대정부 압력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요악'으로서의 일면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26, 1993, p. 18.

96) Frank L. Wilson, "Communism at the Crossroads: Changing Roles in Western Democracies," *Problems of Communism*, vol. 41, no. 3 (May-June 1992), pp. 99-101.

97) *Ibid.*, pp. 102-104 참조.

98) 이와 유사한 주장은 Ciria-Cruz, *op. cit.*, pp. 51-61.

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혁명적인 대안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떠한 경제적 대안도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객관적 요청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한 장기적 생존이 가능한 사회주의를 확보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대안도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통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전환시대의 역사적 교훈이다.<sup>99)</sup>

---

99) 이와 비슷한 견해는 임마누엘 윌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 "현대세계체제에 있어서 마르크스,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사회주의의 경험", 쿠친스키·윌러스타인·조영환 편,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235-51; Andre Gunder Frank, "Revolution in Eastern Europe: Lessons for Democratic Social Movements (and Socialists?)," *Third World Quarterly*, vol. 12, no. 2 (April 1990), pp. 36-52; Ralph Miliband, "Socialism in Question," *Monthly Review* (March 1991), pp. 16-26; Ralph Miliband, "Fukuyama and the Socialist Alternative," *New Left Review*, no. 193 (May-June 1992), pp. 108-13 등을 참조.

## 참 고 문 헌

- 공제욱 외, 『필리핀 2월혁명』, 민중사, 1987.
- 구에레로, 아마도 (정종길 역), 『필리핀 사회와 혁명』, 공동체, 1987.
- 레닌 (허교진 역),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 소나무, 1987.
- 레닌 (김영철 역), 『국가와 혁명』, 논장, 1988.
- 박은홍 편, 『제3세계 민주변혁과 선거의 정치경제학』, 백의, 1992.
- 사상문예운동 편,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풀빛, 1990.
- 스탈린 (서중건 역), 『스탈린 선집 1: 1905-1931』, 전진, 1988.
- 시슨, 호세 마리아, “필리핀정세와 3단계변혁전략,” 『말』, 1989년 5월호.
- 앤더슨, 페리 (장준오 역), 『서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이론과 실천, 1987.
- 쿠친스키 외,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 Abinales, P. N., “Searching for the Philippine Eden in the Post-Bases Era”, *Kasarinlan*, Vol. 7, No. 4 (2nd Qtr 1992).
- Arroyo, Dennis M., “The AFP vs. the NPA: The Issue of Mass Support”, *Social Weather Bulletin*, September 1991.
- Barry, Ka, “Resist Authoritarian Tendencies within the Party! Let a Thousand Schools of Thought Contend!”, *Kasarinlan*, Vol. 8, No. 1 (3rd Qtr 1992).
- Bello, Walden, “The Crisis of the Philippine Progressive Movement: A Preliminary Investigation”, *Kasarinlan*, Vol. 8, No. 1 (3rd Qtr 1992).
- Constantino, Renato, *The Nationalist Alternative*. Quezon: Foundation for Nationalist Studies, 1979.
- de Lima-Sison, Julieta, “Jose Maria Sison on the Mode of Production”, *The New Philippine Review*, Vol. 1, No. 1 (May-July 1984).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sia 1991 Yearbook*.
- Fernandez, Alejandro M., *The Philippines and the United States: The Forging of New Relations*, Quezon: NSDB-UP Integrated Research Program, 1977.
- Ferrer, Miriam C., “The Dynamics of the Opposition to the US Bases in the Philippines”, *Kasarinlan*, Vol. 7, No. 4 (2nd Qtr 1992).

- Frank, Andre Gunder, "Revolution in Eastern Europe: Lessons for Democratic Social Movements (and Socialists?)", *Third World Quarterly*, Vol. 12, No. 2 (April 1990).
- Garcia, Josef L., "No Left Turn." *Kasarinlan*, Vol. 7, No. 4 (2nd Qtr 1992).
- Guerrero, Amado, *Philippine Society and Revolution*, Oakl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Filipino Patriots, 1979.
- Guidote, Tony and Aida Lava, "Let's give Peace a Chance?" *Social Weather Bulletin*, February 1990.
- Hayami, Yujiro, Ma. Agnes R. Quisumbing, and Lourdes S. Adriano, *Toward an Alternative Land Reform Paradigm: A Philippine Perspective*, Manila: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90.
- Hill, Hall, "The Philippine Economy under Marcos: A Balance Sheet", *Australian Outlook*, Vol. 36, No. 3 (December 1982).
- Jones, Gregg R., *Red Revolution: Inside the Philippine Guerrilla Mov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Liwanag, Armando, "Reaffirm Our Basic Principles and Rectify Errors", *Kasarinlan*, Vol. 8, No. 1 (3rd Qtr 1992).
- Longid, Frank, "CPP Leaders Crack Whip", *Manila Chronicle*, January 6, 1993.
- Magno, Alexander R., "Defining the May 11 Mandate", *Kasarinlan*, Vol. 7, No. 4 (2nd Qtr 1992).
- Mao Tse-Tung, *Selected Military Writings of Mao Tse-Tung*,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 Miliband, Ralph, "Socialism in Question." *Monthly Review* (March 1991).
- \_\_\_\_\_, "Fukuyama and the Socialist Alternative", *New Left Review*, No. 193 (May-June 1992).
- Porter, Gareth, "Strategic Debates and Dilemmas in the Philippine Communist Movement", *Pilipinas*, No. 13 (Fall 1989).
- Putzel, James, *A Captive Land: The Politics of Agrarian Reform in the Philippines*.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92.
- Saulo, Alfredo B., *Communism in the Philippines: An Introduction*, Quezon: Ateneo de Manila University Press, 1990.



- Schram, Stuart, *The Thought of Mao Tse-Tu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Sison, Jose Maria, *Struggle for National Democracy*, Quezon: Progressive Publications, 1967.
- \_\_\_\_\_ with Rainer Werning, *The Philippine Revolution: The Leader's View*, New York: Crane Russak, 1989.
- Skocpol, Theda,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Tasker, Rodney, "Grassroot Suppor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2, 1992.
- Third World Studies Center, ed., *Marxism in the Philippines*, Quezon: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88.
- Timberman, David G., "The Philippines at the Polls", *Journal of Democracy*, Vol. 3, No. 4 (October 1992).
- Tornquist, Olle, "Democracy and the Philippine Left", *Kasarinlan*, Vol. 6, No. 182 (1990).
- Tupaz, Omar, "Toward a Revolutionary Strategy of the 90s", *Kasarinlan*, Vol. 7, No. 2-3 (4th Qtr 1991-1st Qtr 1992).
- Wilson, Frank L., "Communism at the Crossroads: Changing Roles in Western Democracies", *Problems of Communism*, Vol. 41, No. 3 (May-June 1992).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編, 『毛澤東集』, 東京: 蒼蒼社, 1983.